

# 2024~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

2024. 8.



기획재정부

Ministry of Economy  
and Finance

# 순서

I. 국가재정운용계획 의의 .....	1
II. 2024~2028년 경제여건 및 전망 .....	2
III. 2024~2028년 재정운용 방향 .....	6
IV.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.....	10
V. 재정혁신 추진방향 .....	14
[참 고]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.....	21

## I. 국가재정운용계획 의의

□ 중기적 시계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는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

-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으로 대내외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·보완
- '04년 최초 수립('04~'08년 계획) 이후 '07년부터 국회에 제출
- 국가재정법 개정('14년)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제출 30일전까지 수립방향 국회 보고 의무화(국가재정법 제7조 제9항)

□ 관계부처, 민간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

-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,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단 및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

### <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 >

-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(기획재정부 → 각 부처, '23.12월)  
\* 각 부처는 중기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 ('24.1월말)
-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,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부처·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('24.1월~)
-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단 구성·운영 ('24.3월~)
- 분야별·지역별 예산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 ('24.4~8월)
-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('24.5.17.)
-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 ('24.8.2.)
- 재정정책자문회의를 통해 관계부처·지자체·전문가 의견수렴 ('24.8.21.)
-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('24.9.2.)

## II. 2024~2028년 경제여건 및 전망

### 1 대내외 경제 여건

#### 세계경제

- (2024년)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, 교역 부진이 완화되면서 세계경제 성장세는 완만한 회복 흐름

\* 글로벌 교역량 전망(% IMF, '24.7월): ('23) 0.8 → ('24) 3.1 → ('25) 3.4

- 경기는 IT 중심의 제조업 부진 완화, 주요 수출국 회복세 등으로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나, 그 속도는 국가마다 상이

\* '23→'24년 성장전망(% IMF): (美)2.5→2.6 (中)5.2→5.0 (유로존)0.5→0.9 (英)0.1→0.5 (韓)1.4→2.5

- 물가는 원자재가격 안정, 통화긴축 영향 등으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, 중동 정세 악화 등 불확실성 상존

\* '23→'24년 물가전망(% IMF): (美)4.1→2.9 (中)0.2→1.0 (유로존)5.7→2.4 (英)7.3→2.5 (韓)3.6→2.5

- (2025년 이후) 성장과 물가 흐름이 대체로 안정화되겠지만, 향후 회복경로에 리스크 요인 잠재

- '25년은 세계교역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, 주요국 통화 긴축 완화 영향 등으로 회복 흐름 지속 전망

- 중장기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변동성, 주요국 간 무역분쟁과 공급망 분절화, 이상기후 등 높은 불확실성 지속

세계경제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(%)

		'24	'25	'26	'27	'28	'29
세계 성장률		3.2	3.3	3.2	3.1	3.1	3.1
- 선진국	성장	1.7	1.8	1.8	1.7	1.7	1.7
	물가	2.7	2.1	2.0	2.0	2.0	2.0
- 신흥국	성장	4.3	4.3	4.1	4.0	3.9	3.9
	물가	8.2	6.0	4.9	4.4	4.3	4.2

\* 출처: World Economic Outlook (IMF, '24~'25년은 '24.7월, '26년 이후는 '24.4월 전망 기준)

## 국내경제

□ (2024년) 물가상승세 둔화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, 수출·제조업 호조세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 지속

○ 글로벌 교역·반도체 업황 개선, 방한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양호한 수출 회복세가 성장을 견인

\* 수출(전년동기비, %): ('23.3/4)△9.7 (4/4)5.7 ('24.1/4)8.1 (2/4)10.1 (7)13.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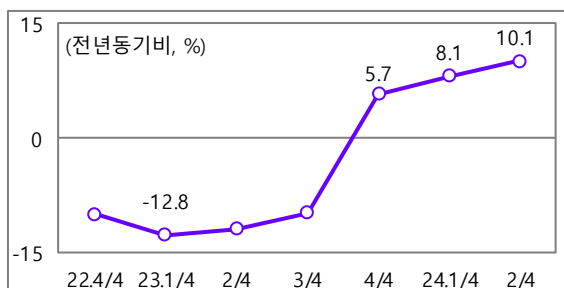
- 내수는 물가 등 제약요인 완화로 완만히 회복되겠으나, 부문별 회복속도의 차이 예상

\* '24년 물가전망(전년비, %): (정부<7월>)2.6 (OECD<5→7월>)2.6→2.5 (KDI<5→8월>)2.6→2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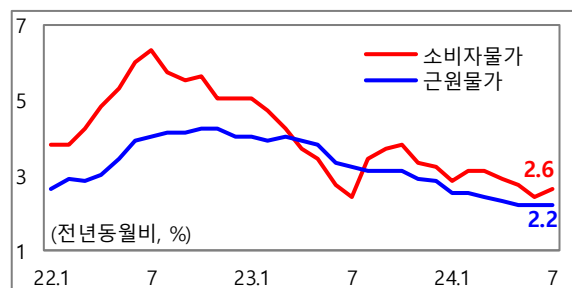
○ 물가는 원자재가격·기상여건 등 공급측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은 있으나,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적 둔화 흐름 지속 전망

\* 소비자물가(전년동월비, %): ('24.1)2.8 (2)3.1 (3)3.1 (4)2.9 (5)2.7 (6)2.4 (7)2.6

통관수출 추이



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



□ (2025년 이후) 경기·물가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,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

○ '25년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, 고물가·고금리 완화로 내수여건이 개선되며 안정적 회복세 전망

\* '24→'25년 한국 성장전망(%): (IMF)2.5→2.2 (OECD)2.6→2.2 (KDI)2.5→2.1

○ 다만,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, 경제의 역동성 복원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 가속화 필요

---

**재정수입**

---

- (국세수입)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국세수입이 일시적으로 부진한  
상황이나, 중기적으로 경기회복과 함께 증가세 유지 예상
  - '24년에는 '23년 경기둔화 여파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 
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
  - '25년 이후에는 기업실적 호조 등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  
흐름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
- (국세외수입)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나,  
경기 여건에 영향을 받는 법정 부담금 등은 변동 가능성도 존재
  - 기금수입은 現 상승 추세에 따라 지속 증가할 전망
    - 국민연금기금,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가입자  
확대, 임금상승 등에 따라 지속적 증가 예상
  - 세외수입은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

## 재정지출

-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, 계층·지역·세대별 격차, 잠재성장률 저하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소요 증가 전망
  - 저출생·고령화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, 청년·지역·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의 역할 확대 요구
  - 첨단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와 재해·범죄 대응 등 국민안전에 대한 요구도 확대
-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효율화 등 재정혁신 필요성도 높아지는 상황
  - 경제·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업, 부처간·부처내 유사중복 사업, 성과미흡 사업 등을 정비하여 재정누수 차단
    - 다부처 정책수단이 필요한 복잡한 경제·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간 벽을 허물고 사업간 연계도 강화
  -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약자복지 등 민생사업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과제에 과감히 투자

'23~'27년 계획 대비 '24~'28년 부처요구							
(단위 : 조원, %)	'23	'24	'25	'26	'27	'28	증가율
■'23~'27년 계획(A)	638.7	656.9	684.4	711.1	736.9		3.6
■'24~'28년 부처요구(B)*		656.6**	761.8	813.7	866.0	914.0	6.3***
■계획대비 추가요구(B-A)	-	△0.2	77.4	102.5	129.1	-	-

\* 중기사업계획서 부처요구('24.1월말)    \*\* 국회 확정 본예산    \*\*\* '25~'28년 연평균 증가율

---

### Ⅲ. 2024~2028년 재정운용 방향

---

#### 1 재정운용 기본방향

---

##### 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건전재정기조 견지

---

-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와 고령화·저성장에 따른 중장기 지출 소요 대비 등을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 지속
-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노력 병행

##### ② 건전재정기조 하에서도 정부가 해야할 일은 확실하게 지원

---

-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과 국방·치안·재난대비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본질기능 강화
-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육성 등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미래대비 역량 제고

##### ③ 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혁신으로 재정운용 효율화

---

- 관행적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,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유사·중복 정비, 조세·재정지출 연계 등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 추진
-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, 부정수급 방지 등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개선
- 민자사업 활성화, 국유재산 활용 등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



## 재정수입

□ 재정수입(총수입)은 '24~'28년 기간 중 연평균 4.6% 증가할 전망

○ 국세수입은 '24~'28년 기간 중 연평균 4.9% 증가할 전망

- '24년 기업실적 호조와 '25년 대내외 여건 개선 등에 따라  
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세수 증가 전망

○ 세외수입은 '24~'28년 기간 중 연평균 5.5% 증가할 전망

○ 기금수입은 '24~'28년 기간 중 연평균 3.9% 증가할 전망

< 중기 재정수입 전망 >

(단위 : 조원, %)

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28년	연평균 증가율
▣ 재정수입	612.2	651.8	677.7	706.4	731.5	4.6
○ 국세수입	367.3	382.4	400.4	421.4	444.3	4.9
○ 세외수입	28.2	36.6	34.5	33.7	34.9	5.5
○ 기금수입	216.7	232.8	242.7	251.2	252.3	3.9

□ 조세부담률은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완만히  
상승할 것으로 예상

< 중기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>

(단위 : %)

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28년
▣ 조세부담률	19.1	18.9	18.9	19.0	19.1
▣ 국민부담률	26.8	26.7	26.8	27.0	27.2

## 재정지출

- 재정지출(총지출)은 '24~'28년 기간 중 연평균 3.6% 수준으로 관리
  - '25년은 '24년 대비 세입여건 개선으로 지출 증가율 소폭 상향, '26년은 건실한 재정구조로 증가율 상향
  - '27년 이후 지출 증가율은 단계적 하향 조정하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노력을 이어가되, 재정혁신 등을 통해 필요재원 확보
- 의무지출은 '24~'28년 기간 중 연평균 5.7% 증가
  - 저출생·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구조, 국채이자 등 증가세가 지속되어 복지분야 지출 확대
- 재량지출은 '24~'28년 기간 중 연평균 1.1% 증가
  - 약자복지, 경제활력, 미래대비 체질개선,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를 위한 재정투자 지속
  - 재정전반의 누수와 낭비를 최소화하고, 부처간 협업을 확대하는 등 재정사업의 효율성·효과성 제고 노력도 병행

### < 중기 재정지출 계획 >

(단위 : 조원, %)

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28년	연평균 증가율
▣ 재정지출	656.6	677.4	704.2	730.3	756.2	3.6
(증가율)	2.8	3.2	4.0	3.7	3.5	
○ 의무지출	347.4	365.6	391.4	412.8	433.1	5.7
(비중)	52.9	54.0	55.6	56.5	57.3	
○ 재량지출	309.2	311.8	312.8	317.5	323.1	1.1
(비중)	47.1	46.0	44.4	43.5	42.7	

##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

□ (재정수지) '25년부터 재정준칙안을 준수하며 그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

○ 관리재정수지를 '24년 △3%대 중반(△3.6%)에서 '28년 △2%대 중반(△2.4%)으로 관리하여 적자폭 개선

※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\*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'24년 △1%대 후반(△1.8%)에서 '28년 △0%대 후반(△0.8%)으로 관리

\* 통합재정수지 = 관리재정수지 + 사회보장성기금 수지

□ (국가채무) 국가채무비율은 '28년까지 50% 수준으로 관리

<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>

(단위 : 조원, %)

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28년
▣ 관리재정수지	△91.6	△77.7	△75.8	△73.1	△72.2
(GDP대비, %)	(△3.6)	(△2.9)	(△2.7)	(△2.5)	(△2.4)
※ 통합재정수지	△44.4	△25.6	△26.6	△23.9	△24.7
(GDP대비, %)	(△1.8)	(△1.0)	(△1.0)	(△0.8)	(△0.8)
▣ 국가채무	1,195.8	1,277.0	1,353.9	1,432.5	1,512.0
(GDP대비, %)	(47.4)	(48.3)	(49.1)	(49.8)	(50.5)

## IV.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

### < 기본 방향 >

- ◇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 약자복지, 경제활력 확산, 미래 체질개선 및 안보·안전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중점 투자
  - ① (사회) 사회적 약자·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
  - ② (경제)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, 광역교통 확충, 농어업 미래성장산업화 및 선도형 R&D 투자 지원
  - ③ (행정) 국민안전, 국방, 외교·안보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뒷받침
- ◇ 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혁신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핵심 정책과제에 재투자

□ (사회분야) 맞춤형 지원 강화, 저출생 대응,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, 교육·돌봄 확충 및 물관리 인프라 투자 지속

- (보건·복지) 저소득층·노인·장애인·한부모 등 사회적약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,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자립지원 확대
  - 저출생 대응을 위해 양육·돌봄, 주거 등을 집중지원하고, 필수의료·지역의료 및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
- (일자리) 청년 및 중장년 취업활동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, 노동약자 보호 강화
  - 일·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 활성화, 사업주 부담 경감 등 적극적 투자 확대
- (교육)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(RISE) 본격 추진, 반도체·바이오 등 미래 첨단분야 인재양성, 의대 교육여건 개선 적극 지원
  -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속 확대를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, 유보통합·늘봄학교 등 교육·돌봄에 대한 차질없는 지원

- (문화·체육·관광) 콘텐츠·연관산업의 수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,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관광 콘텐츠·인프라 확충
  - 인문문화·예술을 활용한 미래세대 투자 및 정서적 치유·회복, 지역 특색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확대 및 광역 관광개발 지원
- (환경) 가뭄·홍수 등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고,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상·하수도 지원 등 물 인프라 투자 지속
  - 녹색 신산업 육성 및 수출을 촉진하고, 저탄소·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 강화

---

□ (경제분야)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, 광역교통망 확충, 농어업 미래성장산업화 및 선도형 R&D 투자 지원

---

- (산업·중기·에너지)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유지·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고,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 지원
  - 유망 벤처·창업기업 글로벌 성장 지원,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확충을 통한 스케일업 촉진 및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
- (SOC) 국토 연결성 극대화를 위해 지방 광역철도·도로망을 확충하고, 교통요금 부담 경감 및 교통서비스 개선 추진
  - 지방권 도시철도 확대 및 GTX 등 광역급행철도의 차질 없는 개통 지원, K-패스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교통서비스 개선
- (농림·수산) 농어민 소득·경영안전망 구축, 전략작물 자급률 제고로 식량주권 확보, 수급관리 강화를 통한 농수산물 물가안정
  - 청년 농어업인 육성, 스마트 농어업 확산, 농식품 수출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 농어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지원
- (R&D) AI반도체·첨단바이오·양자 등 세계최고 전략기술,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한 혁신·도전형 연구 등 역동경제 견인·성장동력 확충
  - 세계 수준의 국제 공동연구, 신진연구자의 안정적 연구지원, 출연연 간 융합연구 확대 등 연구환경 생태계 유연화 확대

---

□ (행정분야) 공공질서 확립, 재난대비 예방적 투자 강화,  
국방역량 및 능동적 외교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

---

- (공공질서·안전) 첨단·지능범죄로부터 전국민 안심체계 구축,  
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및 보호 강화
  - 극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재해예방 인프라  
내실화 및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기술·장비 지속 투자
- (국방)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, AI·드론·우주 등 첨단전력  
증강 등 국제적 긴장과 불확실성에 대비한 핵심전력 보강
  -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병 봉급 인상 및  
의·식·주 등 기본 생활여건 개선 등 장병 복무 만족도 제고
- (외교·통일) 우리 기업·인력 해외진출 등 국익과 연계한  
ODA 확대, 아프리카·중아시아 등 양·다자간 협력 강화
  -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국민적 통일 공감대  
확산을 위한 북한인권 개선, 재외동포 지원·보호체계 강화
- (일반·지방행정) 기업 지방이전, 취약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자본·  
인력의 지역 유입 촉진 등을 통한 지역 주도형 발전전략 지원
  - 통계·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정책결정 지원 등 디지털플랫폼  
정부 구현, 국민 체감 서비스 디지털화 확대 등 뒷받침

< 2024~2028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>

(단위 : 조원, %)

구분	'24	'25	'26	'27	'28	'24~'28 연평균
총 지출	656.6	677.4 (3.2)	704.2 (4.0)	730.3 (3.7)	756.2 (3.5)	(3.6)
1. 보건·복지·고용	237.6	249.0 (4.8)	261.0 (4.8)	273.5 (4.8)	286.3 (4.7)	(4.8)
2. 교육	95.2	98.5 (3.5)	102.1 (3.7)	105.5 (3.4)	108.9 (3.2)	(3.4)
3. 문화·체육·관광	8.7	8.8 (1.3)	8.9 (0.9)	9.0 (0.9)	9.1 (0.8)	(1.0)
4. R&D	26.5	29.7 (11.8)	30.0 (1.1)	30.3 (0.8)	30.5 (0.7)	(3.5)
5. 산업·중소기업 ·에너지	28.0	28.3 (1.1)	28.6 (1.2)	29.0 (1.2)	29.3 (1.1)	(1.1)
6. SOC	26.4	25.5 (△3.6)	26.0 (2.0)	26.4 (1.6)	26.9 (1.8)	(0.4)
7. 농림·수산·식품	25.4	25.9 (1.9)	26.3 (1.5)	26.6 (1.2)	26.8 (0.9)	(1.4)
8. 환경	12.5	13.0 (4.0)	13.1 (1.1)	13.3 (1.0)	13.4 (0.9)	(1.7)
9. 국방	59.4	61.6 (3.6)	63.4 (2.9)	65.4 (3.1)	67.1 (2.6)	(3.1)
10. 외교·통일	7.5	7.8 (3.7)	7.9 (1.5)	8.0 (1.3)	8.1 (1.0)	(1.9)
11. 공공질서·안전	24.4	25.1 (2.6)	25.7 (2.5)	26.3 (2.3)	26.8 (2.0)	(2.3)
12. 일반·지방행정	110.5	111.3 (0.6)	118.9 (6.9)	125.4 (5.4)	131.9 (5.2)	(4.5)

---

## V. 재정혁신 추진방향

---

### 1 지출 재구조화

---

---

#### 지출 구조조정

---

- 의무지출 등 재정소요 확대에 대응하여 재정여력을 확보하고, 재정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출구조조정 지속 필요
  - 경제·사회구조 변화로 타당성이 낮아진 관행적 사업을 줄이고,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
  - 지원체계 개편, 집행방식 변경,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에 중점

---

#### 조세·재정지출 연계

---

- 재정운용 수과정에서 조세·재정지출 간 통합·연계 관리 제도화
  - 조세지출도 재정지출과 같이 12대 분야로 연계·관리하고 dBrain<sup>+</sup>을 통한 통합관리 기반 구축
  - 각 부처의 지출 요구시, 유사·중복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예산안·세법개정안 마련시 유사·중복 지출 정비
  - 조세-재정지출 효과 비교분석이 필요한 사업(군)에 대한 '통합심층평가' 시범 도입·시행 등 평가·환류체계 마련



## 민간투자 활성화

- 민간의 창의·재원을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적기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적극 발굴
  - 기존 도로·철도 외에 문화·관광시설, 지자체 청사 등 신규 민자 대상시설이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\*
- \* 주무관청 대상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시설 발굴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
- 민자사업 추진 부담 경감 및 집행 점검체계 구축·강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
  - 수요예측재조사 기간을 4개월 단축(270→150일)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
  -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 주무관청·민간간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
  - 민간투자 사업 적기 집행을 위해 민간투자 집행 점검회의 개최 (24.3월, 최초), 민간투자의 집행 목표를 공유하여 신속 집행 도모

## 국유재산 활용 확대

- 토지·건축 개발을 적기에 추진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, 유휴 국유지 활용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
  - 토지개발이 가능한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지속 발굴하여, 청년·신혼부부·고령층 주거안정 등 국가정책 지원
  - 도심 노후 청·관사 등은 「청·관사+공익·수익시설」로 복합개발하고, 국가의 미활용 유휴 국유재산은 효율적 활용을 위해 매각 추진
- 지자체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  - 지자체 대상 국유재산 활용 수요조사를 통해 시급·중요사업은 중점 관리과제로 선정하여 유형별 맞춤형 지원\* 실시
- \* 공익사업 등 목적을 위한 국유지 매각, 지자체 협업을 통한 국유지 개발 등

---

## 보조금 관리체계 개편

---

-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모니터링\* 및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\*\* 강화

\* 모니터링: ('23) 7,521 → ('24) 8,000건      \*\* 현장점검: ('23) 400 → ('24) 450건

- 상반기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부정징후 모니터링 패턴을 개선하고 계약절차 관리 강화 등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반영

-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\*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, 정보공시 강화 등 보조금 운용상황 분기별 점검 시행

\* 기재부 재정관리관(주재), '24년 보조금 편성부처(46개) 정책기획관으로 구성

- 국고·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간 데이터\*를 연계하여 국고·지방 보조금간 중복 수령 방지

\* 보조사업 신청자의 최근 보조사업 수행 정보 및 신청 중인 타 공모사업 정보

---

## 재원간 칸막이 해소

---

-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·회계는 효율적 사업운용을 위해 다른 기금·회계로 전출·예탁 추진

-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부문 간 투자 불균형을 개선하고, 시장기능 활용이 효율적인 분야는 민간재원 적극 활용

## 세입기반 확충

-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한편, 불필요한 비과세·감면 정비, 조세회피 관리를 통해 세입 누수 요인 차단
  - 투자·고용, 결혼·출산양육 지원 등 ①경제활력 제고와 ②미래 대비를 위한 조세정책을 통해 중장기 세원기반 확충
    - \* ① R&D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, 가업상속·승계제도 개선 등
    - ② 결혼세액공제 신설,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, 출산·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
  -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 합리화
    - \* 상속·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,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조정 등
  -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및 부가가치세 수시 부과 근거 마련 등 역외세원·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
  - 정책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이 미흡한 비과세·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통해 종료 또는 재설계

## 3 재정제도 혁신

### R&D 투자시스템 개혁

- 대형 R&D 투자의 적시성·신속성을 확보하고, '선도형 R&D'로의 전환점 마련을 위해 R&D 예타제도 폐지 추진
  - 대규모 연구형 R&D 착수를 기존 대비 약 2년 이상 단축하여 첨단기술을 신속 확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변화에 대응
- 1천억원 이상 대규모 R&D에 대해서는 기획 부실화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사업유형에 따른 맞춤형 심사 등 보완절차 마련
  - 연구형 R&D는 추가 소요기간 없이 신속히 추진하되, 기획완성도 제고 및 필수항목 중심의 전문검토 실시
  - 시설장비/체계개발은 선행기술개발을 분리하고 사업유형 및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검증 제도 도입

---

## 부담금 정비

---

- 원점 재검토를 통해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은 합리적으로 정비하고, 관리체계 강화 등 제도혁신을 병행 추진
  - 부담금 부과목적·원칙에 맞지 않거나, 부과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한 부담금은 신속히 정비
  - 정비 이후 존치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경제·사회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효율 적정성 등 지속 점검·정비
  - 부담금별 존속기한 설정, 신설 통제 강화,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추진

---

## 국가결산체계 개편

---

-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, 활용할 수 있는 결산서 작성을 위해 ‘국가결산체계 개편방안’을 중점 추진
    - 재무제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양식을 간소화하고, 회계·기금을 포괄하는 국가 전체 현금흐름을 재정활동별(운영/투자/재무)로 파악가능한 현금흐름표 신설
    - 디브레인 시스템 고도화와 아울러 관계기관\* 시스템 수정, 시범결산·가결산 등 사전준비를 거쳐 '25년 결산부터 시행·적용
- \* 개별시스템에서 업무처리 후 예·결산서를 디브레인 시스템에 연계하는 기관, 디브레인 시스템 거래코드를 사용하는 기관 등

---

## 국가계약제도 개선 및 공공조달법 제정 추진

---

- 기업부담 완화, 혁신·신산업 지원, 공정성·투명성 제고 등을 주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·추진
  - 수수료 경감 등 경제적 부담 완화, 서류 제출 부담 경감 및 계약제도의 합리성·유연성 제고
  - 혁신적·도전적 연구개발 신속 추진 및 신생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
  -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, 계약 관련 공개서류 확대 및 계약의 목적·성격에 맞는 평가기준 적용
- 공공조달의 적극적 역할 및 체계적 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「공공조달법」 제정 추진
  - 공공조달의 기본원칙 및 기술혁신, 사회·환경적 고려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 및 체계적 성과관리체계 제도화

---

## 국채시장 선진화

---

- 국고채 발행비용 감축, 국채시장 변동성 완화 등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에 집중된 국고채 수요 기반을 외국인·개인 등으로 다양화
  -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개선\*, 외환시장 구조개선\*\* 등 외국인 국채 투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노력 지속
    - \* 외국인 투자자 국채투자 비과세('23.1월) 및 등록제 폐지('23.12월), 국채통합계좌 개통('24.6월) 등
    - \*\*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('24.1월), 외환거래시간 연장('24.7월) 등
  - 우리나라 국채의 세계국채지수(WGBI) 편입 추진
  - '24.6월부터 발행이 개시된 개인투자용 국채('24년 1조원 발행 예정)의 안정적 시장 안착 지원
- 이와 함께, 시기별·연물별 국채 발행량 적정 배분 등으로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며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지속
  - 시장 상황 및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, 과도한 변동성 확대시 조기상환 등의 시장안정조치 적기 시행

## 재정준칙 법제화

-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재정준칙의 법제화 추진
  - 제21대 국회에서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제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입법 노력 지속

## 장기재정전망 실시

- 경제·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중장기 재정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제3차 장기재정전망 실시('25년도)
  - 국내외 전망 사례의 면밀한 분석 및 관련 기관·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전망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
  - 전망결과 공개범위 확대 및 다양한 시나리오 적용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지원

## 공공기관 재정건전화

-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 수정계획 수립·이행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위험 관리 강화
  - 시장 상황 및 투자계획 변동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'24년 재정건전화 수정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점검 실시
  - 재정건전화 수정계획, 기관별 재무관리방안 등을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제출(국가재정법 제9조의2)

**(1) 보건·복지·고용 분야**

- 저소득층, 노인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강화
  - 생계·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, 기준중위소득 인상,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
    - 기초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, 자산형성, 금융지원 확대
  - 기초연금 인상, 노인일자리 확대 등으로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고, 고령자 복지주택 확산 등 주거안정 뒷받침
  -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지원하고, 장애인연금 인상 및 일자리 지원 확대로 안정적 소득 보장
  -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비 지원 지속 강화
- 초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·가정 양립, 양육, 주거 등 집중 투자
  -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유연근무 등 출산·육아기 지원 확충으로 일·가정 양립 여건 개선
  - 아이돌봄 지원 확대, 공공·민간 역량을 활용한 틈새돌봄 지원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·돌봄 부담 경감
  - 결혼·출산가구 등에 대한 주택자금 확충,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주거마련 부담 완화
- 의료개혁 뒷받침을 위해 필수·지역의료 인력·인프라에 과감한 투자
  -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전공의 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교육비용 일부 지원
  -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및 지역 거점병원 인프라·운영을 지원하고 소아·분만 등 국민의 생명·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진료 역량 확충
- 마음 돌봄 체계 구축, 치료체계 재정비, 재활 지원 등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정신건강 지원 확대

## 【참 고】 일자리 분야 '24~'28년 재정투자 중점

-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뒷받침
  - 「교육·훈련 → 취업지원 → 고용창출」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
  - 중장년층의 체계적인 경력관리 및 재취업·계속고용 지원
  - K-Hightech Training 등 첨단·전략산업 중심 직업훈련 강화로 일자리를 통한 소득 상향이동 확대
- 노동약자 보호,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 지속 추진
  - 근로자 이음센터 등 노동약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, 복지·안전 지원 확대로 일터환경 개선
  - 대·중소, 원·하청 상생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여 능동적 상생 생태계 조성
  - 임금체불·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, 장애인의 일을 통한 자립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현장 산업재해 예방 지원
-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
  - 육아휴직 급여 인상,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 보장
  - 근로시간 단축대체인력 등 일가정 양립에 따른 사업주 부담 경감
- 고용안전망 지속 확충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
  - 구직급여, 국민취업지원제도,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안전망을 지속 지원하되, 근로유인 및 지속가능성 제고
  - 고용-복지-금융 연계지원, 심리상담 강화 등 고용서비스의 질 제고
- 노인·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중심 직접일자리 집중지원
  - 노인일자리, 자활근로 등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지속 확충



## [2] 교육 분야

□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전 생애(유초등~평생)에 걸친 차별없는 교육기회 확대 중점 지원

- 유보통합·늘봄학교 등 교육·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, 교육급여 등을 통해 저소득층 교육·학습기회 보장
- 고물가·고금리 등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\* 및 학자금대출 지속 지원

\* (국가장학금) 9구간 신규 지원 (근로장학금) 14→20만명 (주거안정장학금신규) 월 20만원

- 소외계층(저소득·노인·장애인 등)을 위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신설 및 물량 확대(8 → 11.5만명 / 노인바우처 신설(0.8만명) 포함)

□ 미래 핵심분야 인재 양성 집중 지원 및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대학지원체계 구축

- 대학-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, 이차전지, 바이오 등 첨단 분야 특성화대학 및 부트캠프 등 지원을 통한 인재 양성
- 기존 대학혁신 지원사업을 통합하고, 성과기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 시행 뒷받침
-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, 대학 통합유도를 위한 글로벌 대학 지원

\* ('23) 10건 → ('24) 10건 → ('25) 5건 → ('26) 5건 ('23~'26년 총 30건)

□ 디지털 혁신 및 글로벌 역량 강화

- AI·디지털 교과서, 에듀테크 기술 활용 등 디지털 기술의 교육 현장 활용을 적극 지원
- 해외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, 유학생 유치 활성화, 청년 국제교류 확대 등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

### [3] 문화·체육·관광 분야

- '끊김없는(seamless)' 한류소비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콘텐츠 + 연관산업(뷰티·식품 등) 대상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
  - 대형 한류축제를 구심점으로 콘텐츠·연관산업 소비 촉진 및 한류박람회, 해외거점 확대를 통한 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
  - K-컬처 연관산업 중심 마케팅 및 인바운드 유치 지원을 통한 외래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수요 충족 및 산업 고부가가치 지원
- 취약·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격차 해소 및 미래 예술인재 육성, 인문·예술을 통한 사회이동성 제고 및 정서적 치유 지원
  - 통합문화이용권, 스포츠강좌이용권, 프로스포츠관람권 지원 확대
  - 취약계층 아동 대상 '꿈의 스튜디오' 및 어린이청소년 극단 신설,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확대 등 예술교육 지원
  - 발달장애 특화 독서프로그램, 디지털 과몰입·ADHD 및 위기 가정 청소년, 재소자·노숙자 대상 인문예술치유 지원
- 전문선수 인력풀 확대 및 은퇴선수 지원으로 선수 경쟁력 제고
  - 우수선수 지원 확대 및 훈련여건 개선, 은퇴선수 직업전환 프로그램 도입으로 선수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
- 지역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
  -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등 인프라 확충 및 접근성 개선,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발굴·육성
  - 박물관·미술관 지역순회 지원, 북스테이·시골서점 등 지역 기반 독서 증진 프로그램 운영
- 포괄적 국가유산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자연유산·예비문화유산 지원 강화, 궁능 활용프로그램 등 국가유산 향유기회 확대

#### [4] R&D 분야

- 세계 탐타어 기관과의 글로벌 공동연구를 지속 확충하고, 보스턴-코리아, 한국형 APRA-H 등 플래그십 성과 창출 주력
  - 연구책임자에 독립·자유 부여, 평가등급 미 실시, 후속연구 연계 등 우수연구를 우대하는 혁신·도전형 R&D 투자규모 확대
- 3대 게임체인저 「2030년 글로벌 3대 강국(G3)」 도약을 위해 대형사업 중심\* G3 이니셔티브 구현 뒷받침
  - \* (AI) AI반도체 활용 K-클라우드 (바이오) mRNA 백신개발 (양자) 양자 플래그십
  -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 등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기술군은 최초 상용화를 통한 新시장 선점을 위해 전방위 지원
  - 반도체 첨단 패키징, 차세대 SMR 등 반도체·원전 新수출 대응, 세계 최초 Pre-6G 구현, 「2032 달착륙」 우주기술 등 미래대비 투자
- 신유형 재난, 신종 범죄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안전 R&D 투자로 국가본질 기능 역점
  - 수소 에너지 기술자립화, 청정수소 생산-유통-활용 등 탄소중립 R&D 지원으로 2050 넷제로 정책을 착실히 이행
- 석박사 연구장려금, 석박사 대통령과학장학금 및 석사 우수장학금, Stipend 등 학생 연구원 지원 3종 세트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
  - 기초연구는 신종·고난도 기술 개척연구, 우수과제 이어달리기, 국가 아젠다 등 Bottom-up 일변도가 아닌 정책·전략성 병행
  - 기업 R&D는 특화형 기술창업(TIPS), 딥사이언스·딥테크 등 수월성에 집중하고 R&D 융자 등 지원방식 다변화 지속
  - 출연연은 국가임무형 과제 이행을 위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역할을 점진 강화하는 등 개방·협력연구를 통한 창의성 확대

## [5]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 분야

-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전주기 생태계 종합지원
  - 「웹리스-파운드리-후공정」 전주기 초격차 확보를 위한 26조원 규모의 「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」 뒷받침
  - 이차전지,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원
- 원전·신재생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 지원, 자원공급망 안정화
  - 체코 원전수주 계기 유망 원자력기업의 재도약 및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펀드·융자·보증 등 지원 강화
  - 석유비축 확대, 핵심광물 비축기반 강화, 안정적 요소 수급 지원 등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자원안보체계 구축
- 수출 회복세 공고화, 외국인·지방투자 확대를 통한 투자강화
  - 바우처 확대, 보증 지원 등 수출지원 강화 및 외투·지투보조금 확대를 통한 투자 활성화 뒷받침
- 글로벌 중기·스타트업 육성, 혁신생태계·성장사다리 조성
  -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, 글로벌기업 협업 확대 등 유망 스타트업 인/아웃바운드 지원 및 AI·웹리스 등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
  - 제조기업의 스마트화, 非제조기업의 수출기반 강화 및 중견기업으로의 '점프업' 패키지 지원
- 소상공인 부담완화·재기지원, 골목상권 활력 회복
  - 영세소상공인 금융비용·인건비 등 주요 경영비용 경감
  - 채무조정 규모 및 점포철거비 지원 확대, 再취·창업 연계 강화 등 한계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
  - 스케일업 전용자금 신설,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경쟁력 강화 지원

## [6] SOC 분야

- 국토 공간 연결성 극대화 등 교통혁신을 통해 균형 발전 뒷받침
  - (도시철도망) 출퇴근 시간 단축 위해 지방권 도시철도 확대 및 GTX 등 광역급행철도 차질 없는 개통 지원
  - (전국교통망) 도서·산간 및 국토 최남단 지역 국도망 확충
  - (신공항) 가덕도, 대구경북 등 8개 신공항 적기 개항 지원
- 대중교통요금 부담 경감 및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한 교통불편 해소
  - (대중교통) K-패스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교통서비스 개선
  - (교통혼잡) 병목구간 개선 및 도시철도 과밀구간 차량 증차
  - (교통약자)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도입 지속 지원
  - (교통안전) 노후 교량·터널 보수·개축 및 도로 배수시설 정비
- 공간혁신을 통해 노후화, 공간 단절 등 지역발전 저해 요인 해소
  - (뉴:빌리지) 저층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
  - (산업단지) 산단 진입도로 구축 등 지역산단 경쟁력 강화
  - (철도지하화) 도시 단절을 초래하는 도심지 철도시설 지하화
  - (수자원) 홍수취약 지역의 국가하천 승격 등 정비 확대
- 자율주행차, UAM 등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인프라 경쟁력 지원
  - (미래모빌리티)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확대 및 UAM 상용화 지원
  - (첨단기술) OSC·무인 장비 등 신기술을 활용한 도로 건설 지원
    - \* OSC(Off-site Construction, 공장생산): 공장에서 부품 생산 후 현장 조립하는 방식
  - (해외건설) 글로벌 PIS펀드 출자 통해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

## [7] 농림·수산·식품 분야

- 농어민의 소득·경영 안정을 위한 직불 관련 예산 확대
  -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, 농가소득의 최대 85%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·강화
  -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직불 및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친환경·탄소중립직불 확대
- 스마트화, 청년 농어업인 육성, 수출 지원 등 농어업 경쟁력 제고
  - 스마트팜·스마트양식장 조성 등 농어업 미래 성장 산업화 지원
  - 청년이 농어촌에 진입하여 새로운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거, 자금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
  - 농수산 유망 수출기업 육성 및 수출시장 개척 지원 강화
- 유통구조 개선 및 선제적 수급관리로 먹거리 물가 안정
  - 농산물 비축 및 계약재배 확대, 사전 관측·강화 등을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
  - 온라인 도매시장 등 유통경로를 다양화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산지조직 규모화,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
- 농어촌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재구조화
  - 취약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등 농어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 강화
  - 노후화된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재해예방 SOC 투자 지속

## [8] 환경 분야

- 2030 NDC(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) 이행 지원, 녹색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촉진을 통해 글로벌 녹색강국 도약 뒷받침
  - 탄소감축인프라 구축(국내외) 확대, 사용후배터리·공정부산물 활용 등을 통한 순환경제 육성 및 대체자원 확보 지원 강화
  - 그린 스타트업 육성, 녹색금융 공급 확대 등으로 유망 녹색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산업계 저탄소공정 전환 촉진
  - 무공해차 보조금은 국제동향, 지원 효과성을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효율화하고, 충전인프라 보급을 내실있게 추진
- 기후변화 영향으로 빈번해지는 수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,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
  - 댐 건설 및 하천 준설 등 치수능력 확대, 선제적·과학적 홍수정보 제공을 위한 AI 예보체계 구축 등 치수안전 강화
  - 하수관로 정비, 하수처리장 설치, 노후상수도 개량 등 상·하수도 인프라에 대해 지속 투자하여 생활용수 확보·수질개선 노력
- 오염·유해 물질의 체계적 관리 및 폐기물 안정적·위생적 처리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구현
  - 토양·수질·대기 등의 환경오염물질 관리 강화, 유해화학물질 및 해외직구제품 관리 역량 제고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주력
  -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, 바이오가스화 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폐자원 활용 저탄소 에너지 확보에 지속 투자



## [9] 국방 분야

□ 北 위협 고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다변화된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첨단전력 도입 지원

○ 北 핵·미사일 등 다양화되는 위협의 억제 및 압도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\*

\* 핵심표적 타격능력 강화, 北 미사일 다층방어체계 확충, 특수작전능력 제고 등

○ 미래 전장 환경 주도를 위한 드론 및 對드론체계 강화, 유무인 복합체계 확충 및 독자적 위성기술 확보 등 비대칭 전력 보강\*

\* 레이저대공무기 및 중거리자폭드론 도입, 무인수색차량 및 425 위성 개발 등

□ 수출경쟁력 강화 등 첨단전략산업으로서의 방위산업 육성 추진

○ “K-방산 수출 글로벌 4강 기반 구축”을 위해 방산기업 금융지원, 수출 유망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등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\*

\* K-방산 수출펀드, 글로벌 공급망 진입지원(GVC 30), 부품국산화개발지원 등

□ 장병 복무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의·식·주 등 생활여건 지속 개선 및 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군 의료체계 강화

○ 병 봉급 인상을 약속대로 이행(165→205만원)하고, 1인 1실 폴업션 간부숙소 부족물량을 '26년까지 해소

\* 간부숙소 부족물량 12,342실 확보계획: ('24) 3,665 ('25) 2,276 ('26) 6,401실

○ 군 병원 특성화 분야 지원 확대\* 및 장기군의관 처우개선을 위한 응급 진료 보조비 신설\*\*

\* (수도병원) 중증외상환자(총상·폭발상 등) 재활센터, (구리병원) 치유회복센터

\*\* 응급진료 시 건당 10만원, 월 최대 150만원 지급

□ 전투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여건 보장 및 과학기술강군 전환 가속화

○ 기능성 등 개선 방한피복 보급 및 위리어 플랫폼 확충

○ 실전적 훈련 강화를 위해 과학화훈련장 및 전투체육시설 확충

\* 실기동·실사격 과학화훈련장(4→9개소), 실내전투체육관(18동), 연병장 현대화(11개소)



## [10] 외교·통일 분야

- 국격에 걸맞는 기여를 위해 공적개발원조(ODA)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, 우리기업·청년 연계 등 질적 내실화 병행
  - \* '19년(3.1조원) 대비 '30년까지 ODA 규모 2배이상 확대('23.6, 재정전략회의)
- 경제협력 가능성이 큰 아프리카·중앙아 등 전략적 지역에 집중 지원하고, 우리기업·청년 해외진출 기반을 지속 확대
- 집행부진·성과미흡 사업 등 정비하여 유·무상 연계 고도화 등 다부처 협업 ODA를 확대하고, 유망기업 진출 등과 ODA 연계
- 2025 APEC 정상회의, 한-중앙아 정상회의 등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 내 위상 제고
  - 2024-25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, 인도-태평양 전략 이행으로 글로벌 가치·국익 외교 본격 전개
  - 양자·다자간 경제협력 등 강화를 통해 경제안보·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적극 참여 및 의제 설정 주도
-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인상 등을 통한 초기 정착지원 확대
  -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역대 최대폭 인상(전년대비 50%) 및 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 지원
-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른 재외동포 지원·보호체계 강화
  -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된 취약동포 등의 모국 초청을 통해 한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
  -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교육·문화·경제·사회 등 다양한 분야 교류 및 유대강화를 통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강화

## [11] 공공질서·안전 분야

- 마약·보이스피싱 등 첨단·지능범죄에 대응하여 최첨단 과학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, 범죄피해자를 두텁게 지원
  - 빠르고 정확한 과학수사를 위해 최첨단 수사기법·장비 적극 도입
    - 약물분석 자동화, 다크웹 모니터링 등 마약 원천차단,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·보이스피싱 등 수사를 위한 AI 분석장비 도입
  - 범죄피해자에 대한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고, 2차 범죄 피해 대비 신변보호를 강화
    - 범죄피해자 생계비·장례비 지원한도를 상향하고, 2차 범죄 피해 위험 대비 민간경호 서비스 전국 확대
- 심각한 재판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부 노력과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재판처리 촉진 및 절차적 병목 해소에 주력
  - 법원장 직접재판(‘법원장 재판부’ 운영) 지원, 재판감정제도 개선과 더불어 전문인력·법정 등 인적·물적 인프라도 확충
- 극한호우·이상강우로 급증하는 수해 재난 강도와 피해에 대응·예방하기 위해 지역단위 재해예방 인프라 투자 확대
  - 호우피해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·저수지 등 개별시설을 지속 정비하되, 예방효과가 높은 지역단위 풍수해 종합정비 확대 추진
  - 도심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우수저류시설을 지속 설치하고, 하상도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차단시설 확대
- 기술·산업 발전에 따른 배터리·전기차 화재 등 ‘신유형재해’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재해 대응능력 강화
  - 기존의 기술·장비 대응 한계로 국민 생활밀착형 소규모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대응을 위한 소화약재 개발 등 투자 확대
  - 배터리 과충전 제어와 이상징후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물량 확대 등 예방·대응 장비 확충

## [12] 일반·지방행정 분야

- 디지털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적극 지원
    - 디지털서비스 개방, 지능형 서비스 확대 등 디지털정부서비스 민간 연계 및 이용 환경 개선 추진
    - 범정부 인공지능(AI) 공통기반 구축 등으로 정부부문에 인공지능 도입 기반을 마련
    - 시스템 노후장비교체, 범정부 신규장비 통합구축 등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안정성 강화에도 지속 투자
  -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,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 등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소멸 대응 지원
    -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('24년~)으로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·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
    - 인구소멸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(1조원),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등 실시
    - 부처간 협업으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\*를 지원하여 민간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 발전정책을 뒷받침
- \* (주거) 지역맞춤형 주거복합단지, (일자리)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(생활환경) 지역상권활성화 지원
-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및 재기지원을 추진하고, 반도체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
  - 국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SMR(Small modular reactor) 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정책펀드 조성

## 【별 첨】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

분야	지 표	'24년	'28년
보건·복지 · 고용	▪ 기초연금 수급자수(만명)	701	879
	▪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인원(만명)	12	16
	▪ 국민연금 수급자수(만명)	732	934
교육	▪ 글로벌 대학(개교, 누적)	20	30
	▪ 평생교육바우처(만명)	8	18
문화·체육 · 관광	▪ 문화콘텐츠산업 매출규모(조원)	156	200
	▪ 문화콘텐츠산업 수출규모(억\$)	132	250
	▪ 외래관광객 수(만명)	1,103	3,000
	▪ 국민생활체육참여율(%)	62.4	70.0
R&D	▪ 신변종 감염병 발생시 mRNA 백신 개발 소요 기간(일)	-	200
	▪ 양자 컴퓨팅 국내 기술개발(큐비트)	50	300
	▪ 글로벌 R&D 투자(조원)	1.8	2.5
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	▪ 스마트공장 수준 제고 (고도화 1 이상, 누적)	9,000	13,000
	▪ 반도체 아카데미 인력양성(누적)	1,320	4,520
SOC	▪ 고속도로 연장(km)	5,009	5,451
	▪ 철도 연장(km)	4,675	5,254

분야	지 표	'24년	'28년
농림·수산·식품	▪ 청년농 육성(만명, 누적)	2	3
	▪ K-Food+ 수출(억\$)	135	230
환경	▪ 온실가스 배출량(백만톤)	613.5	561.3
	▪ 무공해차 누적 보급(만대)	103.0	298.0
국방	▪ 군 간부 주거시설 보급률(%)	82.9	95.0
	▪ 방위력개선비 비중(%)	29.7	30.2
	▪ 성과기반 군수지원(PBL, 종)	19	24
외교·통일	▪ 對아프리카·중양아 등 전략지역 (단위: 억불, 유상 사업승인 + 무상)	16.0	27.8
공공질서·안전	▪ 불법체류 외국인 수(만명, 연말기준)	37	28
	▪ 실화재 훈련 시설(개소)	4	8
일반·지방행정	▪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구축(종) * 본인신청에 따라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서비스	130	250
	▪ 지역활성화투자 펀드(모펀드, 조원, 누적)	0.3	1.5